

건설동향브리핑

CERIK

제711호
2019. 6. 3

정책동향

- 新기업구조조정제도의 실효성 제고 방안
- 대안제시형 종합심사제, 간이 방식 고려해야

시장동향

- 건설업 청년층 이탈... '힘들고, 미래 불안' 66%

산업정보

- 해외 주요 도시의 인프라 만족도 평가
- 美 산업재해 관리 시스템의 체계와 시사점

건설논단

- 민간투자 확대와 기업가 정신

社告

6월 10일 건설동향브리핑은 쉽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Construction & Economy Research Institute of Korea

新기업구조조정제도의 실효성 제고 방안

- 회생 기업의 모럴 해저드 막고, 보증 전문기관 의견 반영해 제도 제정해야 -

■ 금융위, P-Plan 및 워크아웃¹⁾ 등 기업구조조정제도의 실효성 점검을 위한 TF 구성 발표

- 금융위원회는 기업 회생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실용적인 결과물 산출을 목표로 ‘기업구조조정제도 점검 TF’ 회의를 지난 5월 중순 개최하였음.
 - TF 구성의 목표는 기업구조조정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이며, 향후 기업구조조정제도의 개편안을 논의할 예정임.
- TF의 주요 이슈는 회생 절차시 신규 자금 지원(DIP 금융) 및 인수합병(M&A) 활성화를 위한 자본시장 중심 구조조정제도의 도입 등임.
 - DIP(Debtor In Possession)란 기존 경영자를 구조조정 기업의 관리인으로 선임하게 하거나, 중소기업 등은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회사의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두는 ‘기존 경영자 관리인 제도’를 말하며 DIP 금융은 회생 절차 기업에 대해 운전자금 등 신규 자금을 지원하는 금융을 말함.
 - 인수합병(M&A) 활성화를 위해 부실 기업이 회생 계획 중에 M&A를 진행할 경우 M&A의 성사율을 높일 수 있도록 채권 금융기관의 협조를 강화하는 방안과 기업이 회생 계획 인가 전에 M&A를 추진할 경우 일정 기간 채권기관이 가진 채권의 매각을 보류하는 방안이 포함됨.
 - 그 외 TF의 주요 이슈로는 워크아웃제도에 재산보전처분 방식 도입, 채권은행의 사전적 구조조정 활성화를 위한 여신관리 시스템 개선 등이 있음.

■ ‘기업구조조정제도 점검 TF의 주요 이슈

- ‘기업구조조정제도 점검 TF’의 주요 이슈인 DIP 및 DIP 금융, 보증기관의 M&A 활성화 지원 이슈 등이 현실화되면 부실 채권의 증가로 인한 건설보증 전문기관의 재무적 부담은 가중될 것으로 판단됨.
 - 경영진이 회생 절차를 꺼려 회생시킬 수 있는 회사가 파산으로 이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자는 DIP 도입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DIP가 활성화되면 기업 대주주나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겨 채권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회수액은 작아질 수 있음. 그리고 DIP 금융이 확대될 경우 상환을 담보 받지

1) P플랜(사전회생계획제도)은 구조조정 방식의 일종임. 법정관리를 통해 채무조정을 거친 뒤 워크아웃이나 자율협약 체제로 전환해 신규 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임. 워크아웃은 기업의 수익성을 높이고 시장의 수요와 경쟁에 적합하도록 기업의 인력구조, 영업구조, 재무구조, 법적 구조, 소유구조 등을 최적화하려는 경영 행위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을 기반으로 한 채권단 주도의 기업구조 개선 작업을 말함.

못하는 채권이 늘어 건설보증 전문기관의 재무건전성 또한 나빠질 수 있음.

- 더불어 회생 기업에 대한 채권금융기관의 M&A 활성화 지원 방안은 채권금융기관의 입장에서는 채권 회수 금액 저하로 해석이 가능함.

● 보증기관의 회생 기업에 대한 의무 증가에도 불구하고 채권기관 내 보증 전문기관의 권리는 여전히 미약함.

- 지난 2016년 3월, 보증 전문기관도 워크아웃 기업에 대한 주(主)채권 금융기관으로 편입되어 자금의 신규 공여 등 기존에는 없었던 의무가 가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채권기관으로 지정되지 않는 등 은행을 중심으로 한 채권단의 여러 권리에서는 여전히 배제되고 있음.²⁾

※ 제5차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정시 워크아웃 절차에 참여하는 채권 금융기관의 범위가 기존의 신용 공여액 500억원 이상인 금융기관에서 ‘모든’ 금융 채권자로 확대되어 전문 공제기관 또한 주채권 금융기관에 편입됨.

■ 새로운 기업구조조정제도 제정, 산업별 보증 전문기관의 의견 수렴 과정 필요

● 기업구조조정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산업별 보증 전문기관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함.

- 회생 기업에게 여신을 제공한 주채권 금융기관 내에서 보증 전문기관은 기업의 올바른 회생을 위한 바른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상황임. 이런 배경 아래에서 회생 기업에 대한 신규 자금(DIP 금융) 및 인수합병(M&A) 지원 방안이 현실화된다면 보증 전문기관과 은행 및 정책 금융기관과의 기업 회생에 대한 견해 차는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됨.
- 더불어 DIP 금융 제공시에는 채권 금융기관별로 설립 목적 및 기관 운영의 특성을 반영하여 보증 전문기관은 보증을, 은행은 대출 위주로 신규 자금을 공여해야 하는 것이 합리적임.

● 보증기관 등 채권 금융기관이 회생 기업의 M&A에 소극적인 이유는 회생 기업이 작성하는 변제 계획에서 은행과 변제율 차이가 있고 현금 변제율이 낮기 때문임.

- 보증 전문기관이 회생 기업의 M&A에 소극적인 주된 이유는 회생 기업에 의해 작성되는 변제 계획서에 은행과 보증 전문기관의 변제율 차이가 있기 때문임. 따라서 이 둘의 형평성을 제고할 경우 회생 기업 M&A에 대한 보증 전문기관의 동의율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됨.
- 더불어 회생 계획상 현금 변제율은 사실상 면제(5% 내외)에 가까울 정도로 낮게 산정되고 있어 채권 금융기관들 입장에서는 동의하기 어려움. 현금 변제율을 현실성 있게 산정한다면 채권 금융기관의 M&A 동의율은 높아질 것으로 판단됨.

임기수(연구위원 · kslim@cerik.re.kr)

2)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2조 5항에서는 주채권은행을 해당 기업의 주된 채권은행(주된 채권은행이 없는 경우에는 신용 공여액이 가장 많은 은행)으로 명시함.

대안제시형 종합심사제, 간이 방식 고려해야

- 발주자의 기술제안 요구 주제 지정과 주제별 제안 건수 한정 필요 -

■ 정부, 종합심사낙찰제 1,000억원 이상 고난도 공사에서 대안제시형 도입 추진

- 최근 정부는 산업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취지 하에 ‘국가계약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하였음.
 정부는 종합심사낙찰제를 개선해 입찰자가 시공 방법 등에 대한 창의적인 대안을 제시토록 하여 낙찰자를 선정하는 ‘대안제시형 종합심사낙찰제도’의 도입을 제시한 바 있음.
 - 적용 대상은 종합심사낙찰제 대상 공사 중 규모 1,000억원 이상으로서 고난도 기술이 필요한 현장으로 하며, 1단계 심사(정량 평가)를 통과한 5개 업체를 대상으로 2단계에서 기술제안서 및 투찰 가격을 평가하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음.
- 종합심사낙찰제에서 기술제안서 평가를 가미하는 방법은 일본의 종합평가낙찰제의 기술제안 평가형 S형과 유사한 측면이 있음. 즉, 경쟁 참가자에게 시공상의 대안 등과 관련한 기술제안을 하도록 요구하고, 그 실현성이나 안전성 등에 대해 심사·평가를 실시함.
 - 기술제안의 요구 항목은 ① 종합적인 코스트 절감, ② 공사 목적물의 성능과 기능 향상, ③ 환경 대책 등 특히 배려가 필요한 사항의 대응 방법 등에 대한 기술제안임.
- 기술제안을 요구하는 주제는 공사 내용에 따라 1~2개를 설정하는 것으로 하고, 지정된 주제에 대한 기술제안은 주제별로 최대 5개를 기본으로 함.
 - 기술제안의 범위를 과도하게 설정하는 것은 경쟁 참가자에게 큰 부담이 되며, 기술제안의 질도 떨어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발주자는 해당 공사의 특성을 이해한 후에 중요한 기술적 과제를 추출하여 특화된 제안을 경쟁 참가자에게 요구함.
 - 발주자가 요구한 제안 수를 넘은 내용에 대해서는 평가하지 않음.
- 기술제안은 해당 제안이 공사의 품질 향상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단순히 기술제안 건수에 의해 평가하거나 경쟁 참가자를 선별하기 위해 무리하게 차등을 두지는 않음.
 - 추출한 기술적 과제의 중요도에 따라 배점을 설정하고, 제안된 기술력의 차이가 가산점으로 적확하게 반영될 수 있는 평가 기준을 설정함.
 - 품질 향상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발주자는 평가를 실시하기 이전에 표

준안에 의한 품질을 충분히 파악해 두어야 함.

- 배치예정 기술자의 '기술제안에 대한 이해도'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배치예정 기술자를 대상으로 기술 대화를 실시함.
- 기술제안을 평가할 때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거나, 공통적으로 평가하지 않는 사항은 다음과 같음.
 - 타 기관 및 다른 공사와의 협의·조정이 필요하거나 이에 대한 우려가 있는 제안
 - 구조물의 형상 변경이나 구조 계산을 다시 해야 할 필요가 있는 제안
 - 시공 시기나 시공 시간대가 변경됨에 따라 실시가 불가능한 제안
 - 중복 제안이나 오버 스펙으로서 설계도서나 시방서 등의 규정을 넘은 고가의 재료 사용이나 공법 변경 등 과도한 비용 부담을 요구하는 제안

■ 일본, 1단계 기술능력 심사 통과자를 대상으로 2단계에서 기술제안과 투찰가격 평가

- 일본에서는 최근 경기 침체 등에 따라 공공공사의 입찰자 수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여 2단계 방식의 종합평가낙찰제를 활용하고 있음.³⁾
- 2단계 선발 방식은 주로 기술제안형 입찰에서 적용되고 있는데, 우선 공사수행능력을 심사하여 상위 5~10개 업자를 선정한 후, 1차 선정된 업체를 대상으로 기술제안이나 시공 계획을 제출토록 하여 심사함. 그 후 가격 투찰을 받고 각 사의 시공 체제를 확인한 후, 가중치 방식이나 제산(除算) 방식 등에 의거하여 최종 낙찰자를 결정함.
 - 경쟁 참가 요건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실적이나 과거 시공 성적 이외에 기술자의 자격, 영업소 소재지 등이 주요 항목으로 지정됨.
- 일례로 국토교통성의 관동지방정비국에서 발주한 수도권중앙연락도로 칸자키 고가교 상부 공사⁴⁾ 사례를 살펴보면, 종합평가낙찰제 표준Ⅱ형이 채용되었고, 입찰공고 후 15개 업체가 응찰하였음.
 - 1단계에서 기업의 시공 실적과 공사 성적, 그리고 기술자 평가를 통하여 6개 업체만이 1단계 심사를 통과하였음.
 - 2단계에서는 기술제안을 받아 기술적 능력을 심사한 후, 가격 투찰을 받고 시공 체제를 확인한 후 종합평가 방식에 의거하여 최종 낙찰자를 결정하였음.

최민수(선임연구위원 · mschoi@cerik.re.kr)

3) 和賀正光, 国土交通省直轄工事における総合評価落札方式の改善について, 建設マネジメント技術, 2012.5.

4) 공종은 강교 상부 공사이며, 주요 공사 내용은 강철 4경간 연속 소수 판형교(L=163m) 시공임(자료 : 국토교통성, 段階選抜方式の実施状況, 2012.2.28, 総合評価方式の活用改善等による品質確保に関する懇談会).

건설업 청년층 이탈... '힘들고, 미래 불안' 66%

- 근로자·업체·교육기관 대상 설문조사, 사회적 처우 '불만족'도 50%에 가까워 -

■ 건설현장 청년층 유입을 위해서는 '고용 안정성 및 사회 안전망 확보'가 가장 시급

- 현재 건설 기능인력 육성과 관련하여 다양한 정책이 제시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만족도 및 개선 방향에 대한 조사는 부족한 상황임. 본고에서는 기능인력, 발주처, 건설업체, 교육기관 등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⁵⁾ 내용을 정리하여 향후 기능인력 육성을 위한 방안 마련에 도움을 주고자 함.
- 먼저, 건설업의 청년층 이탈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 '작업이 힘들어서'란 응답이 전체의 33.5%로 가장 많았으며, '직업으로서의 미래가 불안정해서'가 32.5%로 뒤를 이음.
- 그렇다면, 청년층 유입을 위한 방안이 무엇이나는 질문에 전체의 44.0%가 '고용 안정성 및 사회 안전망 확보'라고 답하였으며, 다음으로 '직업으로서의 비전 제시'가 21.1%로 뒤를 이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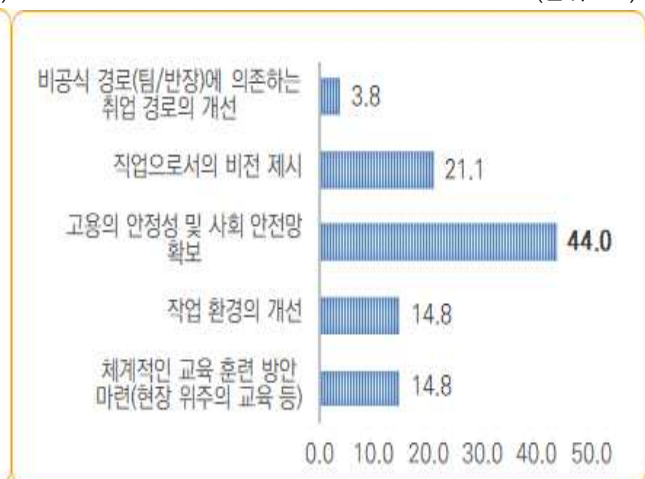
〈그림1〉 건설업의 청년층 이탈 원인

(단위 : %)



〈그림2〉 청년층 유입의 효과적 추진 방안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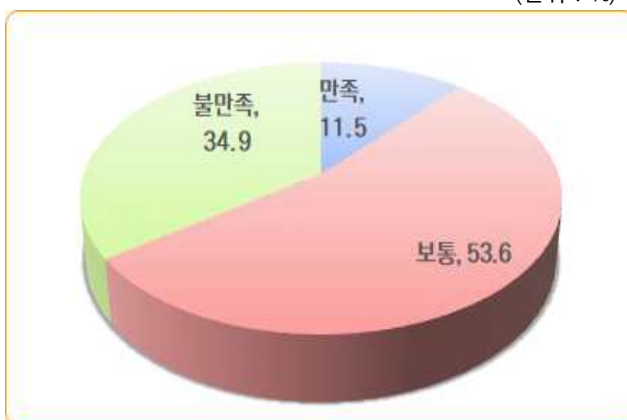
자료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자체 설문조사(2019) 결과.

5) 본 설문조사는 지난 5월 2일부터 5월 15일까지 2주 동안 기능인력, 발주처, 종합건설업체, 전문건설업체,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됨. 총 209부가 회수되었는데 그중 기능인력이 81부(38.8%), 발주기관이 30부(14.4%), 종합 및 전문 건설업체가 68부(32.5%), 교육기관이 30부(14.4%)를 차지함.

- 한편, 현재 건설 기능인력 관련 정책의 만족도는 응답자의 53.6%가 '보통', 34.9%가 '불만족'이라고 답해 전반적인 만족도가 낮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특히, 건설 기능인력 교육훈련 지원 정책 및 커리큘럼의 경우 '불만족'이라고 답한 비율이 30% 수준으로 높게 나타남.
 - 또한, 건설 기능인력의 사회적 처우에 대해서는 '불만족' 응답 비율이 50%에 가까워 개선이 시급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건설 기능인력 지원 정책의 우선순위에 대해서는 '일감 확보'가 25.4%로 가장 많았으며, '사회 안전망 확보'가 21.5%로 뒤를 이음.
 - 그 외 '기능인력 육성기금 조성 필요'에 대해서는 64.6%, '현장 중심 교육 강화'에 대해서는 74.6%, '기능인력 수급 계획 마련'에 대해서는 75.1%, 그리고 '숙련공 및 팀/반장 대상 관리자 교육 의무화'에 대해서는 78.0%가 '찬성'이라고 답함.

<그림3> 전반적인 건설 기능인력 정책 만족도

(단위 : %)



<그림4> 건설 기능인력 지원 정책의 우선순위

(단위 : %)



자료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자체 설문조사(2019) 결과.

■ 미래 지향적 건설 기능인력 양성을 위한 체계 마련 필요

- 설문조사 결과를 종합해보면, 현재 시행되고 있는 건설 기능인력 관련 정책에 대한 만족도가 높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음. 향후 미래 지향적 건설 기능인력 양성을 위한 체계 마련이 필요한 때임.
 - 이를 위해 내국인 건설 기능인력 양성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고 육성 로드맵을 마련해야 함. 또한 교육 체계의 혁신,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범부처 간 협업 체계 구축 및 사회적 처우 개선이 이루어져야 함.

최은정(부연구위원 · kciel21@cerik.re.kr)

해외 주요 도시의 인프라 만족도 평가

- 대중교통 개선과 인프라의 지속가능성·안전성·연결성 향상에 대한 요구 높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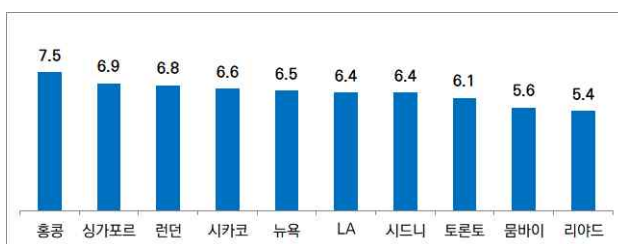
AECOM, 세계 주요 도시의 인프라 만족도 조사 실시⁶⁾

- 글로벌 인프라 기업인 AECOM은 지난 1월 전 세계 10개 주요 도시의 인프라 수준 및 향후 개선 요구 정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였음.
- 조사는 싱가포르, 홍콩, 시카고, LA, 뉴욕, 토론토, 런던, 시드니, 뭄바이(인도), 리야드(사우디아라비아) 등 10개 도시의 거주민 총 1만 750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짐.
- 조사 내용은 인프라의 성능 및 안전성에 대한 만족도, 신규 인프라 프로젝트 관련 의사결정 과정에서 시민 참여 수준, 모바일 기술 및 데이터 등 IT 적용 현황, 향후 개선 필요 영역 등으로 구성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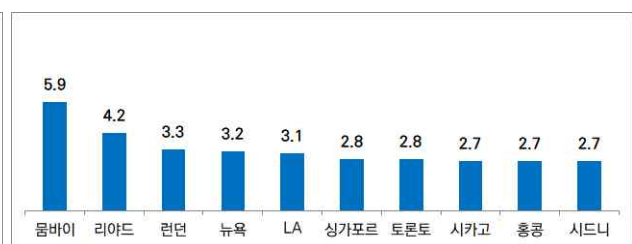
인프라 만족도 조사 결과, 성능에는 만족하나 개발 의사소통에 불만족

- 핵심 인프라 시설 성능 만족도 : 대중교통, 상·하수도 및 전력 등에 대한 수준은 만족(7.5~5.1) 범위로 나타났으며, 홍콩, 싱가포르, 런던 등에서 높게 조사됨(<그림 1> 참조).

<그림 1> 핵심 인프라 시설 성능에 대한 만족 수준



<그림 2> 시민의 인프라 참여 만족 수준



주 : 만족 수준의 척도는 다음과 같음. 매우 만족(10~7.6), 만족(7.5~5.1), 불만족(5.0~2.6), 매우 불만족(2.5~1.0).
자료 : AECOM(2019).

- 시민의 인프라 개발 과정 참여 의향 : 전반적으로 시민들은 인프라 시설의 운영 및 개발 계획과 관련하여 정부 등 인프라 공급 기관과의 의사소통에 대해 불만족을 표했음.
- 시민들은 인프라 시설의 계획 수립, 자원 조달, 개발 및 운영 과정에 대한 정보를 얻고 피드백을 제시하는 등 인프라 전반에 대한 상호작용을 원하는 것으로 조사됨.

6) 본고는 AECOM이 지난 2019년 1월 발간한 “The Future of Infrastructure : Voice of the People”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정리한 것임.

- 그러나 이에 대한 만족 수준은 10점 만점에 평균 3.3점으로 저조한 가운데 뭄바이(5.9), 리야드(4.2)가 비교적 높았고 시카고, 홍콩, 시드니(각 2.7)가 가장 낮았음(<그림 2> 참조).
- 인프라 성능 개선을 위한 비용 및 정보 제공 의향 : 응답자의 상당한 비중은 인프라 서비스 향상을 위한 데이터 제공과 비용 지출 의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됨.
 - 약 절반의 응답자(46%)가 정부 및 공공기관이 인프라 서비스 향상을 위해 스마트폰 데이터 등 개인 정보를 수집·활용하는 것에 대해 동의하였음.
 - 응답자의 37%는 인프라 성능 개선 목적의 자원 마련을 위한 세율 증가에 동의하며, 응답자의 31%는 보다 높은 대중교통 요금을 부담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하였음.
- 지속가능성과 안전성에 대한 관심 증대 : 미래 인프라 개선 영역의 우선순위에 대한 조사 결과 대중교통·상하수도·전력 등 핵심 인프라의 성능 개선 비중이 높았으며, 지속가능성 향상과 재해·재난 대응력에 대한 비중도 높게 나타남.
 - 대중교통 성능 개선, 상하수도·전력 성능 개선은 각각 16.7%, 14.8%로 나타났으며, 지속가능성 향상이 16.2%, 재해·재난 대응력 12.5%, 사이버테러 대응 9.9% 등으로 조사됨(<표 1> 참조).
 - “시 정부의 자연재해로부터의 보호 역량을 신뢰한다”는 41%, “사이버테러로부터의 안전을 신뢰한다”는 의견은 32%로 비교적 낮은 것으로 나타남.

<표 1> 미래 인프라에서 개선이 필요한 우선 분야

(단위 : %)

개선 영역	비중	개선 영역	비중
대중교통 성능 개선	16.7	새로운 대중교통 도입(자율주행차량 등)	8.9
지속가능성 향상(자원 재활용, 재생에너지 등)	16.2	인프라 사용자 수집 정보의 엄격한 관리	8.5
상하수도/전력 성능 개선	14.8	대중교통공공시설의 공공 인터넷 접근성	6.4
재해/재난 대응력(ex. 홍수 대비 등)	12.5	해수면 상승 대응	6.1
사이버테러 대응	9.9		

자료 : AECOM (2019).

- 인프라 개발을 위한 민간 참여 수요 : 전체 응답자의 절반 이상(63%)이 인프라 자원 확보 및 개발을 위한 민간 영역의 관여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음.

■ 시사점

- 대중교통 성능 개선 및 지속가능성 제고 추진과 동시에 시민들과의 소통 확대를 통해 인프라 사업 추진상의 지원을 확보하는 전략적인 방안 모색이 필요함.
 - 프로젝트 계획 및 자원 마련, 개발 등 추진의 정보 공유 및 소통 등 시민들의 참여도를 높이는 것이 성공적인 도시 인프라 수준의 진전에 기여할 수 있음.

박희대(부연구위원 · hpark@cerik.re.kr)

美 산업재해 관리 시스템의 체계와 시사점

- 미국은 원·하도급 재해 분리 산정으로 양쪽 모두에게 안전관리 동기 부여 -

■ 건설업 산업재해 통계

- 미국 노동통계국(Bureau of Labor Statistics, 이하 BLS)은 산업재해를 포함한 다양한 노동부(Department of Labor) 관련 통계를 수집·분석·통합 관리하고 있음.
- BLS 내 산업재해 통계는 ‘Injuries, Illnesses, and Fatalities(이하 IIF)’로 구분되며, 부상재해와 사망재해를 분리하여 관리하고 있음.
 - 부상재해(Nonfatal Injuries) 통계는 Survey of Occupational Injuries and Illnesses(SOII)에서, 사망재해(Fatal Injuries)는 Census of Fatal Occupational Injuries(CFOI)에서 관리함.
 - IIF 통계에서 산업 분류는 북미 산업분류체계(NAICS)를, 재해 발생 형태 및 원인 등은 BLS에서 개발한 Occupational Injury and Illness Classification System(OIICS)을 따름.
- 미국 건설업 산업재해 통계는 크게 빌딩건설공사업, 토목공사업, 전문건설업으로 구분하고 있어, 국내의 건설업 전체 통계만을 제공하는 방식과는 차이가 있음.
 - 빌딩건설공사업(Construction of buildings)과 토목공사업(Heavy and civil engineering construction)은 종합건설업(General Contractor)을 의미함.
 - 2017년 건설산업에서는 7만 9,810명의 부상재해(DA)⁷⁾가 발생하였으며, 이 중 전문건설업에서 발생한 부상재해가 전체의 67.6%(5만 3,960명)를 차지함. 사망재해의 경우 2017년 건설산업 전체에서 971명이 사망하였는데, 전문건설업 사망재해가 62.8%(610명)로 높은 비중을 차지함.

<표 1> 2017년 미국 건설산업 부상재해(DA)와 사망사고

(단위 : 명)

구분	건설업		빌딩건설공사업		토목공사업		전문건설업	
	재해자 수	비중	재해자 수	비중	재해자 수	비중	재해자 수	비중
부상재해(DA)	79,810	100.0%	16,690	20.9%	9,160	11.5%	53,960	67.6%
사망재해	971	100.0%	196	20.2%	152	15.7%	610	62.8%

자료 : U.S. Bureau of Labor Statistics.

주 : 사망재해의 경우 기타 13명이 있음.

7) 미국은 부상재해(Nonfatal Injury)를 크게 하루 이상 병원에서 치료가 필요한 재해(Days away from work, DA), 경미한 부상으로 일상 작업이 제한되는 재해(Restriction), 부상으로 타 작업장에서 일하게 되는 재해(Transfer)로 구분함.

■ 산업재해 관리 주체

- 미국은 노동부 산하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dministration(이하 OSHA)이 건설업을 포함한 산업재해와 관련한 규정을 관리하고 있음.
-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한 모든 사업주는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모든 산업재해(Recordable Injury and Illness)를 기록 및 관리하여야 함.
 - 산업재해 자료의 기록·보관에 대한 규정은 ‘OSHA 29 CFR 1904’에 명시되어 있음.
 - 미국 산업재해 기준은 응급조치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모든 인명 피해(Injury and Illness)이며, 사업주는 5년간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자료를 보관할 의무가 있음.
- OSHA 29 CFR 1904.31(Covered employees)은 산업재해 기록·보관 주체를 근로자에게 임금 주는 사업주 혹은 임금을 주지 않지만 근로자를 상시 관리·감독하는 사업주로 정의하고 있음.
 - 건설사업과 같이 원·하도급 관계가 있는 사업은 재해를 입은 근로자를 상시 관리·감독하는 사업주가 산업재해를 기록·보관하여야 하며, 원도급사와 하도급사가 중복으로 재해를 기록하는 경우는 없어야 함.
 - OSHA 29 CFR 1904.31(b)(3) Standard Interpretations은 상시 관리·감독하는 사업주에 대한 정의를 작업에 필요한 세부 사항, 수단, 방법 및 프로세스를 제공하고 감독하는 자로 명시하고 있음.

■ 미국의 산업재해 관리 시스템이 주는 시사점

- 미국은 사업주(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에게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를 철저히 기록하고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정부 차원에서 개별 기업의 재해율은 관리하고 있지 않음.
 - 미국은 민간을 포함한 모든 발주자가 원도급업체에게 OSHA에서 규정한 산업재해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원도급업체 또한 하도급업체에게 산업재해 자료를 요구하고 건설안전 역량을 갖춘 하도급업체를 선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음.
- 국내의 경우 고용노동부에서 개별 종합건설업체의 산업재해 발생률을 관리하고 발주자는 이를 활용하여 안전관리 역량이 뛰어난 원도급업체를 선정할 수 있지만, 전문건설업체는 산업재해 발생률 산정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미국 시스템과는 차이를 보임.
 - 이는 미국은 원도급과 하도급 업체 재해를 분리하여 산정하지만, 국내는 해당 현장에서 발생한 모든 재해를 원도급업체에게 포함하는 재해 산정 기준 차이에서 기인한 것으로 판단됨.

최수영(부연구위원 · sooyoung.choe@cerik.re.kr)

민간투자 확대와 기업가 정신

경제에도 ‘하인리히 법칙’이 적용된다. 이 법칙은 미국의 여행자 보험회사에서 일하던 하인리히가 사고의 인과관계를 계량적으로 분석해서 1930년대에 발표한 것이다. 1건의 중대사고는 그 이전에 29건의 사고가 있었고, 더 이전에는 300건에 달하는 경미한 사고가 있었다는 ‘1 : 29 : 300 법칙’을 말한다. IMF 외환위기나 글로벌 금융위기 같은 심각한 경제위기도 그 이전의 수많은 경미한 사건이 누적된 결과였다.

올해 1/4분기 경제성장률이 10년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아직까지는 심각한 위기 국면이라고 말할 수 없다. 하지만 점차 300건의 경미한 사고를 넘어 29건의 다소 심각한 사고가 발생하는 단계에 접어든 것 같다. 1/4분기 경제성장률이 저조했던 원인은 수출과 투자 부진이었다. 수출은 전기 대비 2.6%, 설비투자는 무려 10.8%나 감소했다. 건설투자도 0.1% 감소했다. 건설투자의 감소세는 과거보다 훨씬 가팔랐다. 건설투자가 호황에서 불황으로 전환되는 기간이 과거에는 약 2년 반 정도 걸렸는데, 이번에는 약 1년 만인 작년 2/4분기부터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당장 올해부터 생활 SOC나 노후 인프라 투자 확대를 추진하더라도 주택투자 감소 폭을 만회하기 어렵다. 예타 면제 SOC 사업이나 3기 신도시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실제로 투자가 이루어지려면 2~3년은 걸린다. 따라서 건설투자는 향후 2~3년간 계속 마이너스를 기록하면서 국내 경제성장률을 갉아먹고, 일자리 창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 같다.

정부의 대책 방향은 옳다고 본다. 민간투자를 확대하는 것이 답이다. 올해는 작년보다 약 10%나 증가한 470조원에 달하는 ‘슈퍼 예산’ 편성이

이루어졌다. 6조 7,000억원 규모의 추경 편성까지 추진하고 있는데도 경제 상황이 이 지경이니 더 이상 추가적인 재정투자 확대는 어려울 것이다. 특히 설비투자 감소세가 심각한 만큼 민간투자 확대가 중요하다. 문제는 어떻게 민간투자 확대를 견인할 것인가에 있다. 민간이 투자할 돈이 없는 것이 아니다. 만약 강압적으로 민간기업에 투자를 요구하면 ‘투자하는 척’하는 계획은 발표될 수 있다.

민간투자 확대를 위해서는 투자 여건의 조성이 중요하다. 특히 지금은 정책이나 제도가 투자 여건을 좌우할 것 같다. 소득주도성장 정책, 최저임금이나 주 52시간 근무제 등이 어떻게 흘러가느냐가 중요하다. 우리나라에만 있는 ‘갈라파고스 규제’를 정부가 실제로 혁파할 의지가 있는지도 중요하다. 정책의 일관성과 투자 여건 조성에 대한 정부의 진정성을 기업가들이 신뢰해야 민간투자 확대가 가능하다. 그렇지 않다면 국내 투자를 외면하고 해외 투자가 더 늘어날 수 있다. 실제로 우리 기업의 작년 해외 직접투자액은 약 55조원으로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민간투자는 본질적으로 ‘기업가 정신’이 좌우한다. 미래에 대한 낙관론과 모험정신이 핵심이다. 미래를 비관적으로 보는 기업가는 투자를 줄이고 고용도 줄인다. 정부가 기업가 정신의 고취를 통해서 민간투자를 확대하고자 한다면, 기업가의 기를 살리고 투자 여건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과 정책 방향의 전환이 필요하다. <파이낸셜 뉴스, 2019.4.29>

이상호(원장 · shlee@cerik.re.kr)